

코오롱, 구미공장 공권력 투입 임박

경찰병력 1000여명 추가배치 ... 공장장-노조위원장 온라인 책임공방도

60일 넘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월18일 코오롱 구미공장의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후에도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퇴거하지 않고 회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어 조만간 경찰력을 투입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등을 검거하고 노조원을 해산 시키기로 했다고 8월24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주변에서 경비를 서왔던 기존의 1000여 병력 이외에 8월24일 오후까지 1000-2000명 가량의 전경을 추가로 배치키로 했으며 8월25일 이후 충분한 병력이 확보되면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력이 눈에 띄게 늘면서 파업·농성 중인 구미공장 노조원 1200여명은 자체 경비를 강화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공권력을 투입하면 조합원들의 반발로 사태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파업의 책임을 놓고 온라인 공방전을 벌여왔다.

코오롱에 따르면, 구미공장의 조희정 공장장은 8월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조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신규투자와 고용안정 등 파업 초기의 쟁점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공개 질의했다.

조희정 공장장은 파업사태의 책임자는 교섭의 양 대표자인 자신과 위원장이라며 “조합측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회사측도 책임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징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공장의 노조도 8월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장철광 위원장 명의의 글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신규투자와 근무형태 변경안에서 협정근로라는 조건만 달지 않았어도 파업은 수습국면으로 갈 수 있었다”며 “장기파업을 만들어온 것은 바로 회사”라고 반박했다.

장철광 노조위원장은 “협정근로는 노조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회사측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제시한 것은 명백히 장기파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이후 회사는 징계와 고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본질을 외면하고 감정적 대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4/08/>